

# 삼권분립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민주적 운영은 가능하다.

정치외교학과 김광희  
bnkv123@khu.ac.kr



“경찰 권력은 비대해질 것이고 이를 견제하기 위해 경찰국 논의가 시작됐다. “경찰국은 독재 정권으로의 회귀”라는 비판, 그러나 경찰국 신설은 권력 통제에의 취지가 아니다. 경찰국 신설은 민주적·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거대 야당의 입법 밀어붙이기와 여당의 자책골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이 국회를 통과했다. 검수완박 통과로 검찰의 수사권은 단계적으로 경찰로 이양된다. 여야의 중재안을 통해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2대 범죄로 축소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 모든 수사 권한은 경찰로 넘어가게 된다. 경찰 권력은 비대해질 것이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 경찰국 논의가 시작됐다. 경찰국은 행정부의 경찰 통제라는 비판이 있다.

“경찰국은 독재 정권으로의 회귀이다.” 경찰국을 향한 비판이다. 행정안전부(행안부) 산하의 경찰국을 과거 내무부의 치안본부에 비교한다. 이러한 비판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내무부의 치안본부는 경찰 조직 전체를 관리했지만, 현재는 행정부의 독립 외청(外廳)인 경찰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경찰국은 행정부 장관 직속으로 경찰청에 대한 인사권 및 승인이 필요한 중요 정책 사항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윤석열 정부 이전까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치안비서관 등이 경찰청을 직접 지휘 및 통제했다. 경찰국은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을 거쳐 경찰청에 직접 지휘 및 통제가 이루어진다. 이제는 청와대가 아닌, 행안부

장관을 중심으로 인사가 이뤄진다. 경찰국의 기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하던 일을 경찰국으로 이양했을 뿐이다. 경찰 권력에 대한 견제의 역할보다는 행정상의 절차를 변경한 것이 더 큰 핵심이다. 인사권은 이미 행정부에 귀속돼있었다. 경찰은 이전부터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의 통제를 받아온 기관이다. 다른 의견으로는 경찰위원회 권한 확대가 있다. 하지만 경찰위원회의 권한 확대도 결국 견제를 위해서는 행정부의 역할이 요구된다. 그럴 바에는 경찰국 신설이 더 효율적이다.

경찰국 신설은 설득과 민주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는 정치력이 요구된다. 경찰 수사를 직접 지휘하겠다는 발언이나, 행안부 장관의 권한을 확대해석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 시행령으로 법을 왜곡해서도 안 된다.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는 이상만 행안부 장관의 언행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는 행안부 장관의 권한과는 전혀 다른 권한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과 같은 행태를 지속한다면, 제왕적 대통령으로 남게 될 것이다. 경찰국 운영에 대한 국회의 비토 권한과 감사권을 부여하는 등 경찰국의 취지가 경찰 권력 통제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에 기초한 대통령제 국가이다. 8번의 민주적 권력 이양과 1번의 탄핵이 있었다. 직선제 개헌 이후 민주주의는 공고화됐다. 권력에 대한 견제는 필요하지만, 이제는 대한민국 민주제도를 신뢰해도 괜찮다. 지난 역사 속에서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아직도 남아있다. 독재 정권 이후 경찰은 행정부에 종속되지 않은 독립된 기관이다.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지금 경찰 권력에 대한 견제가 요구된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경찰국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경찰국이 제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 경찰국 신설로 허물어지는 삼권분립

지리학과 이대형  
champagnesupernova2003@khu.ac.kr



“삼권분립 취지 허물어뜨리는 경찰국 신설. 폐지야말로 행정부 견제와 정치적 중립성을 지닌 경찰과 권력 분립 아래 국민 권리를 지키는 길.”

1987년, 두 대학생이 숨지고 헌법이 개정됐다. 유신 개헌 이후 한동안 사라졌던 삼권분립의 의미를 되살린 것이 바로 87년 개헌이다.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만드는 입법부, 적용하는 사법부가 권력을 나누고 서로 견제하는 삼권분립이라는 개념은 민주국가에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삼권분립을 다시 명시한 지금의 헌법은 과거 민주화 운동이 현재 국민에게 남긴 최고의 성과다. 그러나 35년이 지난 지금, 그 성과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움직임이 보인다.

지난 8월 2일 출범한 행정안전부 소속의 경찰국이 그 움직임의 대표적인 예시다. 행정안전부의 산하 기관이면서도 다른 계통의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성을 지닌 경찰청은 1991년 출범한 이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행정안전부 소속 경찰국은 경찰청 인사 임용 등 중요한 정책을 관장하며 경찰청을 견제한다는 명분으로 설립됐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경찰의 권한이 커진 것을 문제 삼아 경찰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또 민정수석실이 폐지됐기 때문에 원래 민정수석실이 담당하던 경찰청 인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눈 가리고 입바른 이야기만 할 수는 없다. 경찰의 권한을 견제하는 것보다 행정부의

권한을 견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애당초 경찰국 신설은 역사의 퇴행이다. 개헌 이후 당선된 노태우 대통령이 정권 초기부터 바로잡으려 했던 최우선 과제는 경찰 조직을 정부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이었다. 그 목표에 따라 1991년 내무부 소속의 치안본부가 경찰청이라는 새로운 이름과 모습을 갖추게 됐다. 고문과 잘못된 수사가 만연하던 정부 치하의 공포 경찰의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보지 않아도 되자 국민들은 이에 환호했다. 당시 경찰기관의 독립은 삼권분립의 개념 아래 행정부의 경찰에 대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사법부와 입법부에 비해 막강한 권력을 거느리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 이번 경찰국 신설은 이런 3대 기관의 균형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을 보여주며, 국민이 나라의 주권자인 민주주의 국가에 어울리지 않는 장신구다.

31년 전의 경찰개혁을 지지하고 현재 경찰국 신설에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것은 국민만이 아니다. 견제 대상인 경찰 역시 마찬가지다. 그들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닌 ‘정부의 하수인’으로 불리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을 누구보다도 원하지 않는다. 행정부에 견제 받으며 경찰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경찰은 어느 기관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녀야 한다. 무리한 경찰국 신설 추진이 이루어지던 7월, 경찰 직장협의회에서 등록한 경찰국 신설 반대 청원의 서명 수는 30만 명을 돌파했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대한민국 국가 조직의 균형을 망가뜨리는 경찰국 신설 강행이 올바른 정책이 맞는가. 31년 전에 이미 후회하며 없앴 것이 다시 만들어지고 있다. 이번 정부 공약의 중심이었던 ‘공정’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눈에 훤히 보인다. 신설된 경찰국을 폐지해야 민주주의의 기본인 권력의 분립을 이룩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

